

코로나19에서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__정책적 방향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우리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보면 아니다.
이 사건은 그동안 유래 없던 이례적인 사건으로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을 나누는
진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김준연

대한산업보건의협회 회장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기업에 큰 영향 미칠 것

3차 산업혁명은 제임스 와트(James Watt)가 증기기관을 발명하면서 시작됐다. 산업의 발전으로 지배 권력의 힘은 농지에서 기계로,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옮겨갔고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들었다. 도시의 인구과잉은 식량 부족, 물 오염 등 사회 여러 방면에서 부작용을 낳았다. 뿐만 아니라 감염병이 돌면서 근로자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사망했고 이는 무역, 교통, 산업 등 경제성장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큰 타격을 주었다. 자연스레 근로자의 위생문제가 대두되면서 '산업위생'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보통 '혁명'이라고 하면 인류의 생활양식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드론, 3D 프린터, 나노기술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경우 우리 생활에 미친 영향을 뚜렷이 체감하기 어려웠다. 기술적인 부분의 변화였기에 생활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생명과 직결됐던 코로나19는 달랐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원격 수업 등 우리 사회의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화됐다. 기업 역

시 새로운 형태의 근무방식을 택했다. 원격·재택근무는 사물인터넷의 발전을 가져왔고, 온라인 상거래의 활성화로 기업은 고객의 소비패턴을 파악하기 한결 쉬워졌다. 빅 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의 니즈를 체계적으로 통계내고 분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으로 이 같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은 살아남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원격 수업 등 우리 사회의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화됐다.
기업 역시 새로운 형태의 근무방식을 택했다.

이제 근무 공간에 대한 고찰도 필요해졌다. 소비자 입장에서 온라인 상거래는 클릭 한 번이면 되는 간편한 비대면 거래다. 그러나 이를 넓게 봤을 때는 ‘간편함’으로 요약되기 어려운,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물류센터를 거쳐 가정에 물건이 배달되기까지 많은 시설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생산라인을 짧은 시간 안에 자동화시키기도 힘들다. 특히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 법률 서비스업의 경우 관계 종사자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기는 더욱 어렵다.

4차 산업혁명으로 근로자의 생활 전반을 관리할 때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는 산업현장에서의 재해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일깨워주었다. 미국산업안전보건국(OSHA)은 산업현장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직장 내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세 가지 방법으로 ‘직원 간 전염병 줄이기, 건강한 사업장 운영 유지, 건강한 작업환경 유지’를 제시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미국산업안전보건국이 제시한 재해예방법이 과연 새로운 패러다임인가?’ 의문이 든다. 대한민국에서는 건강한 산업현장 조성하기 위해 이미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시행해왔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의 의무로 ‘정기 건강검진, 보건관리, 작업환경 측정’ 등을 규정해 놓았다.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 전문가 등이 정기적으로 산업현장을 방문해 더 나은 근로환경을 제시하고 근로자들의 건강을 살피는 것이다. 건강한 일터를 위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시스템을 적극 활용했다면 집단감염은 급속도로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집단감염이 일어났던 콜센터와 스타트업 기업 등은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제도 중 일부만 시행하고 있었다.

변화 속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복잡해질 것이다.
때문에 미래의 산업보건은 근로자의 생활 전반을 관리하는 쪽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렇듯 제도의 사각지대가 나온 이유는 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보건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특정업종을 지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는 ‘작업환경측정’주기를 현행보다 2~3배로 늘리자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오히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상황을 해결하고, 나아가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 데 방해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지금, 근로환경의 변화는 빠른 속도로 이뤄질 것이다. 근무시간과 장소가 다양해지면서 기업은 일의 효율성과 근로자의 안전 등을 다른 시각에서 고민하게 될 것이다. 변화 속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복잡해질 것이다. 때문에 미래의 산업보건은 근로자의 생활 전반을 관리하는 쪽으로 변화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산업안전보건 정책은 단순히 사망자를 줄이는 것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 근로자의 생활 전반에 대한 보건관리가 가능할 때 비로소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 맞는 올바른 산업재해 예방정책이 펼쳐질 것이다. 🐼